

“얼마나 기다리나요?”...동네 병원 코로나19 검사 북새통

병원 마다 신속항원검사자 많게는 20~30명씩 대기줄
 일반 환자·코로나19 의심 환자 한 곳 대기...감염 우려도
 병원 사흘 간 업무 마비... “감염 확산 방지 대책 고심 중”

“콜록콜록, 코로나19 검사하러 왔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 지 사흘째인 16일 오전 광주 남구 한 병원.

병원이 문을 여는 오전 9시에 맞춰 입구엔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병원마다 많게는 20~30명, 적게는 4~5명 씩 대기줄이 늘어났다.

곳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와 기침 소리가 터져나왔다. 목이 잠긴 한 환자는 “땀이 많이 안퐁는데, 코로나19 검사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고 토로했다.

병원 입구엔 코로나19 검사 진료안내 문구와 함께 ‘대기 23명’이라는 빨간색의 전광판

이 눈에 띄었다.

한 시민은 환절기를 맞아 비염 진료를 위해 이비인후과를 찾았다가 길게 늘어선 대기 줄을 보고는 발길을 되돌리기도 했다.

접수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문진표 작성을 안내하느라 질새 없이 울리는 검사 관련 문의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다.

푸른색 방호복과 페이스실크를 착용한 병원 관계자들은 양성 판정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서 두 줄 나와 확진 판정 받으셨습니다. 7일 동안 자가격리 해야 한다”며 처방전과 코로나19 확진 판정 안내 종이를 건넸다.

한 병원의 경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환자들도 1층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 판

정을 받은 뒤에야 2층으로 올라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병원을 찾은 부모들은 연신 콜록거리는 어린 자녀를 안은 채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모(23·여)씨는 “인후통과 발열 증상이 있다”며 “다른 병원은 1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여기서 줄이 길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일반진료 환자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한 환자가 한 곳에 모여 대기하는 것을 두고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도 있었다.

한모(38)씨는 “자녀가 미열이 있어 코로나19 음성 판정 받고 진료 대기중”이라며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과 비좁은 한 공간에서 대기해야 해 혹시나 이곳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입구 밖으로 대기줄이 늘어선 만큼 코로나19 검사 환자들이 많아 병원 진료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의심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림막 설치 등 여러 방안을 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을 받으면 추가 PCR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된 지 사흘째인 16일 오전 광주 남구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받고 있다.

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4일부터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지 않

고도, 동네 병원과 의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환기자

‘민주당 텃밭’ 호남지역 지방선거 출발부터 공천 잡음 ‘시끌’

제20대 대선 패배 후 더불어민주당의 쇠신 부족 여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텃밭에서 벌써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해말 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이 결정했지만, 텃밭이 무성했던 광주시의회 여성·청년 선거구 8곳 중 일부가 대선 정국에서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부상하면서 지역정가가 시끌시끌하다.

16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선거 기획단은 지난해 12월 광역의원 여성 선거구 4곳·청년 선거구 4곳을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선거구에 대해 불공정 시비로 텃밭이 일었다.

새로운 여성 정치인의 발굴을 위해 도입한 여성 지역구가 지난 선거에 이어 다시 선정됨에 따라 새로운 인물 보다는 기존 여성 의원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 전용지역구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또 8년간 여성 전용구가 된 지역이 나오게 됨으로써 그동안 시의원을 준비해온 남성 정치인에게는 또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선국면에서 조용했지만,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여성전용구가 민주당내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년경쟁선거구의 경우도 기준이 모호하고 특정 인맥과 연결된 인사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청년·여성전용구 지정은 반민주당 정서를 일으키는 역행적인 결정

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이와관련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평론가 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가장 낮은 시기에 당규에도 없는 시의원 40% 여성·청년 전략공천을 발표해 대선을 앞둔 전략적 패착을 저질렀으며, 전략공천 해당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당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 참정권을 위배하는 것이자 민주당 당헌당규에도 없는 폭거를 시당 위원장으로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의 지적대로 수면위에 가라앉았던 반발이 현실화되고 있다.

‘광주 서구 제3선거구청년경쟁선거구 지정 철회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청년경쟁선거구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대선 정국 수면아래 ‘불공정’ 청년선거구 지정 반발 여성전용구도 뒷말 무성...불공정 공천 경계 목소리

공정한 경선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광주시의원 청년경쟁선거구 4곳 중 공석 2곳과 읍정계 1곳 등 3곳은 사유가 있지만, 서구 제3선거구는 명확한 기준과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현역 시의원의 출마기회를 박탈했다”면서 “청년이 아닌 출마 입지자들의 참정권(피선거권)도 박탈했으며,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선택권도 크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후보들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청년 후보들끼리만 제한된 경선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언론에서도 특정 인맥과 연결된 인사를 염두 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패배 이후 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잡음이 일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과거 시당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들의 제사삼심기 등 불공정한 공천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당원과 지역민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한 민주당원은 “대선 패배후 허탈감에 빠져 있는 지역민들이 눈치를 예사롭지 않다”면서 “또다시 독점 구조인 민주당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잡음이 나오면 예전같지 않은 민주당의 지지가 더 빠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는 “불공정한 공천 그림자가 보인다. 불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민주당이 공천과정에서 지역민을 실망케 하면 이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지방선거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남진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